

# 韓 식량지원에... 北 “생색내기” 개성공단 재가동 압박

北, 한미정상 대화재개 ‘거부반응’ 미사일 도발로 북미협상 불만표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진행된 대구역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을 참관한 모습. /연합뉴스

한미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꺼낸 ‘식량제공’ 카드가 좌초 위기에 놓였다. 북한이 대남선전매체를 통해 한미정상의 식량제공안은 ‘생색내기’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북한 매체 메아리는 12일 ‘북남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글을 통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식량지원은)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고 했다. 이어 “몇 건의 인두주의 사업으로 호들갑 피우는 건 동족에 대한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라고 부연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쏘고, 이에 한미정상

은 지난 7일 밤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수단으로 ‘인도적 식량 지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즉 식량제공을 둘러싼 현안을 살펴볼 때 북한이 한미정상간 대화 재개 카드에 거부반응을 보인 셈이다.

북한이 식량제공을 거부한 이유로는 ‘대북제재 완화가 더 시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남측의 정책적 결단만 남았다”고 했다.

한미정상이 인도적 식량지원을 대화의 활로로 삼으려 했으나,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임이 확인

된 것이다.

한편 여론에서는 북한이 식량제공을 거부하면서 도발행동을 지속하는 이유로 ‘북미협상 부진에 따른 불만 표출’이라고 진단했다.

실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 때 “최근 한미정상간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검토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보이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운을 뗐다.

실 최고위원은 “(북한의 도발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중에 이뤄진 것”이라며 “북미협상 부진에 대한 불만 표출과 (대화 관련) 협상력을 높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추격형 경제 버려야 ‘저성장 덩’ 벗어나”

文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가면 고도성장할 수 있던 ‘추격형 경제’의 익숙함을 버리지 않고는 저성장의 덩을 벗어나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언급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낮은 질서 속 익숙함과 단호히 결별할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다수의 희생 위에 소수에게 기회와 혜택을 집중했던 특권 경제의 익숙함을 깨뜨리지 않고는 불평등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없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변화는 이미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면서 “지난

2년간 변화를 주저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며 대전환을 추진했다. 과거의 낡은 패러다임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중심 경제로 바꿨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도전에 맞서 제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존과 상생의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기초생활 보장을 넘어 기본생활 보장으로 정책의 지평을 넓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번 수석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소회를 밝힌 것이기도 하다.

/우승준 기자

## 여당 “교통대란 막자”... 준공영제 가닥

### 버스파업 D-1

이해찬 “당정간 대책 마련할 것”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전국버스노조)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15일 실시)으로 다가오면서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 여당까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당정 간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대중교통수단은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당 정책방향을 잡겠다”고 알렸다.

‘대중교통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은 다음 각 대중교통회사에 분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대중교통은행은 각 회사가 맡지만, 의사결정이나 책임은 지자체가 진다. 회사의 경우 재정 확보와 적자노선에 대한 감차방지, 경영·처우 개선 등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이날 대중교통 준공영제 실시를 언급하면서도 “(버스노조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서민이 많이 이용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는 대중교통수단을 가지고 총파업을 예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국민께 걱정을 끼치는 일”이라며 “당도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란을 막기 위해 노조·회사 측과도 대화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

앞서 버스노조 등은 올해 상반기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유효기간 종료를 앞두고 임금 보전과 인력 충원, 준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1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이 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시내 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요금 인상

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책임을 돌리며 별다른 대책 없이 마무리했다.

버스 노사의 조정 시한은 14일까지다. 정부·지자체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날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1개 지역 노조가 파업에 찬성한 상태다. 노조의 파업 예상 규모는 운행원 등 3만6500명으로 차량 대수는 1만7800대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와 지하철 연장 운행과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 대책 구제화에 나설 예정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 주한미군장병 초청 안보견학·문화체험

국방부, 경기·강원도 방문

국방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주한미군장병들을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 안보견학과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행사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주한미군사령부 등 각 부대에서 50명의 주한미군장병을 초청한다.

초청된 미군장병들은 안보현장인 을지전망대와 제4땅굴을 견학하고,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장에서 사격 등 전투체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평창 어름치마을에서 백룡동굴 탐방, 양평 여물리마을에서 송어잡기, 딸기 찹쌀떡과 가래떡 피자를 직접 만들며 농촌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도 갖는다.

지난 4월 태권도 캠프를 시작한 주한미군장병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는 총 5회에 걸쳐 경기·강원·충청·경상·전라 지역 역사유적지 탐방, 농촌문화 체험 및 안보현장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문형철 기자 captin@

## 文 대통령 지지율 0.5%p ‘소폭하락’

전국 2020명 대상 조사  
北 미사일 발사 등 영향

집권 2주기를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7일부터 그달 1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20명을 대상으로 ‘5월 2주차 대통령 국정수행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2%p·응답률 6.8%)’를 조사해 13일 발표했다.

그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0.5%p 하락한 48.6%, 부정평가는 1.0%p 오른 47.0%다.

5월 2주차 때 발생한 정계 현안은 ▲북한의 동해 단거리 미사일 발사(4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전화통



화(7일), ▲북한 식량지원 관련 언론보도(8일) 등이다.

이와 관련 여론에서는 문 대통령 지

지율이 소폭 하락한 데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연관 깊은 것으로 진단했다. /우승준 기자